

## 의료법 유감

과천 정부청사 앞은 사시사철 시끄럽다. 이런 저런 이유로 무슨 무슨 법을 철폐 하라는 등, 조항을 삭제 또는 개선하라는 등 시위가 연중 끊일 날이 없다.

특히 올들어서는 더 그런 것 같다. 얼추 기억나는 것만 해도 수차례다. 우선 지난 1월말엔 이천 시민들 3000여명이 몰려와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불허 방침에 반발해 '하이닉스 이천공장 죽음으로 사수하자'는 섬뜩한 플래카드를 내걸고 하루종일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월1일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8000여명이 몰려와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방침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는 뭐니뭐니해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들이 최근에 벌인 것들이 아닐까 싶다. 기자의 출입처 일이기도 했거니와 인원도 많고, 사회적 관심도 높았기 때문이다.

### 왜 의료법이 문제인가

지난 2월 6일엔 서울·인천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 4000여명이 오후 휴진을 강행, 시위를 벌였고 지난 11일 집회엔 2만여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집회였다. 특히 한 의사가 할복 퍼포먼스를 벌인 일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잘 알려졌다시피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몇 가지 조항들 때문이다. △의료 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



글·박수진  
한국경제신문사  
경제부 기자

거 마련 여부 △간호사 업무에 '간호 진단' 포함 여부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 여부 등 10가지 조항이 그런 것들이다.

이중 최대 쟁점은 의료행위 규정에 '투약(投藥)'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는 부분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 행위'란 말 속에 투약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조항에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맞서고 있다.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넣은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의사들은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진단'을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국에도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간호사들의 일상적인 진료보조 행위를 의미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 조항이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앞둔 정부의 계책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간호사들의 노인 돌보기를 독자적인 진단행위로 인정하면 굳이 의사들에게 진단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므로 진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특히 '독소(毒素)' 조항이라고 문제삼는 부분은 '유사의료 행위 인정' 부분이다. 복지부는 "피부미용 수치침 같은 민간의료행위 등이 늘고 있는데 이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곤란했다"며 이를 의료법에 넣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들은 "불법의료 행위를 난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병질환별로 의료행위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사협회는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고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관계 전문학회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법률 규정에 명문화한 만큼 의료계의 자율권이 존중된다는 설명이다.

## 의료계, 왜 여론 지지 못받나

이런 쟁점사안들에 대해 의협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간호진단'이나 '유사의료행위 근거 신설' 등의 조항이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당연히 반발하고 정부와 문제해결을 위해 논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도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논쟁과정에서 의료계는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일까? 아니면 무지한 기자들의 잘못 때문일까?

이번 의료법 파동을 처음부터 지켜본 기자로서는 의료계, 특히 의사협회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의사협회는 전략도 전술로 없는 막무가내식 싸움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월초 한 인터넷 매체가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트리트면서 시작됐다. 바로 의협 대표자가 개정안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단’을 뛰쳐 나오던 시점이다.

기자들의 입장에선 5개월 동안 물밑 논의되던 개정안 내용이 의협 대표자에 의해 언론에 흘러가 모두 ‘물’을 먹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다.

두번째는 전략의 부재다. 의협은 5개월간 큰소리 없이 도장까지 찍어가며 개정안에 합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과정이야 어쨌든 도장을 찍고, 합의해 준 것은 나중에 전면 거부할 근거를 그만큼 줄이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다 협상 막판에 판을 엮고 나왔다고 한다(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후 의협은 전체 언론에 이를 브리핑하지 않고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는 방법을 썼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복지부는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의협이 문제 삼는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가 논쟁의 우위점에 선 것이다.

의협이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바로 각 항목별로 이런 이런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브리핑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의협은 대신 기자단 브리핑 대신 전면 거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보다 실력저지로 가겠다는 전술을 택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실력저지 전술로 얻은 것도 있다.

## 얻은 것도 있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내 입법화를 지연시키는데 성공했다. 의사들의 그같은 대규모 집회가 아니었으면 일반 국민들은 의료법이 무



엇인지, 간호진단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의사 2만명이 모이고 의사가 자신의 배를 가르는 일이 벌어진데서야 관심이 안쏠릴 수 없다. 일부에선 “오죽했으면 의사들이 저럴까” 하는 얘기까지 나왔다.

또 하나 더, 이같은 집단행동으로 의사들의 영향력과 단결력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과시된것도 실리라면 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만나절 휴진, 그것도 서울과 인천지역 의사 일부의 부분 휴진이었지만 지난 6일 휴진사태는 곧바로 부모들로 하여금 2000년 의약분업 사태때 ‘아픈 아기를 들쳐업고’ 이병원 저병원으로 뛰어야 했던 악몽을 되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되도록이면 의사선생님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론의 한편에 형성된 것이다.

### 잃은 것이 더 많아

그러나 그 뿐이다. 그런 사이 여론은 의사 선생님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인식이 굳어져 버렸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협과 복지부 간의 쟁점 사항 뿐 아니라 광범위한 환자 편익 재고방안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런 사항들까지 싸잡아 전면 거부하겠다는 전략 자체가 무리였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든 것이었다. 그런데도 왜 의협 지도부는 전면거부라는 강공책을 들고 나왔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또 하나, 집단 행동의 과격성도 의사 선생님들의 이미지와 주장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데 톡톡히 한 몫했다고 본다. 특히 의사가 배를 가르는 퍼포먼스는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는 성공했을 지 모르지만,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된다. 의사가 집단적인 이해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한 자해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 보다는 그 호전적인 대응방식에 ‘전율’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기자 주위에선 “자기 배를 가르는 성질 급한 의사들에게 생명을 맡겨도 되는지 불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배를 가르고 입원한 의사에게 전국에서 200여개의 화환이 답지했다는 후문이지만, 이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행동이라는 판단이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복지부 기자단의 반응은 여기서 밝히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것이었다고 전하고 싶다.

이제 의사협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달리는 호랑이에 탔으니 이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계속 달리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의협쪽에서도 물론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협측은 "개정안 중 쟁점사항에 대해 분명한 반대와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협의 메커니즘과 졸속처리에 대한 저의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협상장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믿을 사람은, 그런 얘길 들어줄 사람은 이제 없다. 의사협회는 계속 한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 치의사협회 등으로 동조자를 구하고 있다.

기자는 늦었지만 의협이 이제라도 투쟁의 정당성을 찾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의료법 개정안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다시 짜야 한다고 권고하고 싶다. **KHA**

